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10호

발행일: 2025. 11. 14. (금)

제429회 국회(정기회, 2025. 9. 1. ~ 2025.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II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9회 국회(정기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26일 열린 제10차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9회 국회 제10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기재를 의무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및 안정공급체계 법제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지주회사 내 계열사 공동출자를 허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동주택·학교 등에서 폐기물 수거 시 민간업체에도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9회 국회의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3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2)	국회기록원법안	국회운영위원장
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3	법제사법위원회(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등 10인
6	교육위원회(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등 10인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 등 10인
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의원 등 11인
14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진선미 의원 등 11인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1인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 등 15인
17	행정안전위원회(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4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
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 등 16인
26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 등 10인
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 등 16인
28	보건복지위원회(2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 등 11인
3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3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2인
3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등 10인
4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의원 등 16인
4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등 11인
4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현 의원 등 10인
4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등 13인
4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등 10인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등 10인
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 등 10인
4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 등 10인
4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1인
4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 등 11인
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2인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2인
53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2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6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등 15인
6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 등 12인
7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 등 10인
7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 등 10인
7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II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II

개요

제22대 국회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구성되었습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9월 29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등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자세한 내용은 [입법정책브리핑 제2025-9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제도화](#) 이슈 참조) 통과시킨 것에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기타 [입법정책브리핑 제2024-2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 [제2023-9호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활성화](#), [제2021-1호 2050 탄소중립](#) 이슈 등 참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 중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10-26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 국조실)

□ 과제목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설·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소재 기후테크 기업을 우대하는 특화 펀드 조성,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 8. 22.)

②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감축】

- (감축 로드맵) 기존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 수립·제출 및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31~'49년) 감축 로드맵 수립
- (배출권거래제) 4기('26~'30년) 배출권 할당시 엄격한 총량 설정 및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유인 제고
- (탄소크레딧)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 발표, '25.下)
 -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블록체인) 신설,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 조성
 -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 (국제탄소시장 참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신뢰성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표준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탄소시장 진출 지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 위한 지원 및 기반구축
 -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 구축('28년)
-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지속 추진

출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 정부 업무보고(환경부, 2025. 1. 10.)

핵심과제 ② :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검측목표	■ (NDC) 2030 NDC('21) 이행관리	■ (新) 2035 NDC 마련 및 UN 제출(연내) ■ (新) 50년까지 복수의 감축경로(안) 마련(~'25.下), 법제화(~'26.2)
탄소시장	■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중심,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및 시장조성자 등만 시장 참여	■ (新) △유상할당 대폭상향(발전), (新) △기관투자자도 시장 참여('25.2~), (新)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25.上)
녹색투자	■ (녹색금융) 중소기업 약 1.5조원 투자 건인 ■ (녹색조달) 녹색인증 제품 공공조달(조달청, 의무구매(환경부))	■ (新) 약 3.5조원까지 확대(채권, 유동화증권 고려 시 더 확대) ■ (新)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보증 도입(1,400억원) ■ (新) 환경부-조달청 협업을 통해 녹색기술·제품 조달가점 및 대상제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25.上)
전차	■ 성능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 차등적용 ■ (충전기반) 이동거점 → 급속, 생활거점 → 완속충전기 중심 충전기반 확충	■ (新)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생애 첫구매 청년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등 ■ (新) 생활공간 급속 확충, 스마트제어 도입 및 이동형 충전서비스 확대
플라스틱	■ (컵보증금제) 세종·제주 선도 시행 ■ (재생원료) 사용목표 3%	■ (新) 선도지역 지속추진 + 놀이공원·카페거리·프렌차이즈 등 자율시행 확대 ■ 10%('30년까지 30% 목표)

출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소영 의원안: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 작성 의무화 2025. 9.

이소영 의원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시 감축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2025. 9.

김소희 의원안: 기후대응기금 사업 평가 근거 마련 등 2025. 9.

김소희 의원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대응과 피해보상 규정 2024. 11.

정태호 의원안: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대표성 반영 근거 마련 2024. 11.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본 법·제도적과제: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입법과제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방안](#)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사건 결정](#)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8. 12.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제19대 국회,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 담당 부처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담당 부처 간 괴리·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은 미흡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미진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복수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 정부보다 나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함수’로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하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무역·통상 부문과의 연계,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4. 12. 3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기후위기 적응법(가칭) 추진 근거 마련
- 기후위기 적응법(가칭) 법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마련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